

# 學問의 主體性 확립과 土着化의 과제

## — 새로운 敎養敎材 개발 ① —

崔 淙 旭

(國民大·哲學)

### 새로운 敎養敎材 개발

1. 學問의 主體性 확립과 土着化의 과제
2. 政治學 분야의 동향
3. 韓國史
4. 社會學
5. 哲學
6. 女性學

### 1. 問題의 提起

세계는 급격하게 변한다. 東·西의 냉전체제는 그 종말을 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와 학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같지 않다. 현존 사회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冷戰 이데올로기의 질곡으로부터 解放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그 원칙으로 하는 思想·表現·出版의 自由가 단지 구호가 아닌 실질적 현실로, 그것이 정부의 恣意的 決定에 의해 선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基本의 人權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낡은 冷

戰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이것은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이후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듯한 1인상을 준다. 노동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 등은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大學과 學問의 영역은 어떠한가?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듯 多樣性이 존재하는가? 거대한 反共 이데올로기의 증앙집권화는 해체되었는가? 아니다. 냉전 이데올로기의 壁은 아직도 견제하고 그 그물망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당국의 學問과 思想에 대한 탄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은 이를 잘 보여주었다. 맑스는 아직도 學者로서, 思想家로서 復權되지 않았다. '85년 이후 맑스의 사상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복원시키려던 노력은 소련·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맑시즘에 대한 研究熱을 간단하게 일종의 '유행'으로만 간주하는 경박한 태도 자체가 우리 학계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反共이라는 '담론(Diskurs)'의 자연스러운 표출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담론이 내함하고 있는 '권력의지(Wille zur Macht)'에 대한 分析이나 批判에는 무관심

하다. 바로 이런 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는 맑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자신이 가하는 비판 근거에 대해서는 냉정한 반성이나 자기비판도 내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客觀性'과 '價値中立性'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知識 자체가 하나의 '權力-知識'의 담론에 불과하다는 푸코(M. Foucault)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맑스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되었던 '黨派性'이나 '權力에의 意志'가 이제 자신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현재야말로 우리 학계를 지배하는 소위 제도권의 '主流理論'에 대한 재검토와 自己批判이 필요한, 아니 시급한 때가 아닐까?

이러한 문제와 함께 제기되는 또하나의 문제는 學問 主體로서의 우리들 자신과 학계의 主體性 문제이다. 우리 학계가 오랫동안 '學問의 土着化'라는 구호를 외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학계가 굳건한 주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自主性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未解決 狀態로 남아 있다. 主體性의 문제는 政治와 經濟 차원에서만 要請되는 것이 아니다. 文化와 學問의 차원에서도 主體性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民族의 死活에도 直結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미 이 문제 자체에 대한 價値判斷을 전제한 후 특정 사실이나 現實을 문제로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接近하는 個人이나 集團의 이데올로기 혹은 담론과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담론'에 있어서 '서구 학문의 수용과 주체성'이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전연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서 이해될 수도 있다. 學問의 普遍性을 역설하면서 土着化니 主體性이니 하는 것들을 否定할 수도 있다. '지구촌'이라는 시간화된 공간 개념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아직도 그런 낡아빠진 생각을 하느냐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認識이나 科學 자체가 정말 普遍的이고 價値中立의 일까? 현대 科

學哲學者들인 토마스 쿤(T. Kuhn), 라카토스(Lakatos), 파이어아벤트(Feyerabend) 등은 이러한 主張을 근거없는 것이라 否定한다. 하버마스(J. Habermas)의 '認識을 主導하는 關心(Erkenntnis leitendes Interesse)' 또는 푸코의 '權力-知識 연계설'은 과학의 客觀性和 普遍妥當性이라는 神話를 그 근거에서 해체시킨다. 따라서 토착화 혹은 주체성의 문제는 결코 學問의 普遍妥當性이라는 美名 아래 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결코 學問이 가지고 있는 普遍性 자체를 무차별적으로 否定하는 것으로 오했어서는 안 된다. 단지 그 普遍性의 相對性을 강조함으로써 토착화와 주체성의 문제를 부각시키려 할 뿐 별다른 의도는 없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 학계를 支配하는 冷戰의 '담론'이 학문의 自由를 억압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發展에 걸림돌로 作用하고 있다는 認識과 西歐 學問의 受容過程뿐만 아니라 수용 주체로서의 個人과 學術集團에 문제가 있다는 현실 인식과 평가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토론을 위해 좀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사회는 '文化的 植民地' 상태에 있다. 制度圈 學問과 學界도 그러한 植民地狀態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은 낡은 '反共意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이와 같은 非學問의 狀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일련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敎養敎材를 개발하고 있는 학술단체들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歷史的 分析도 아울러 곁들이고자 한다.

## 2. 西歐學問 受容의 場—大學

우리나라에 西歐學問이 公式的인 채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이 땅에 大學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日帝 植民地 시대에 일제는 民立大學設立運動을 지지하는 民族陣營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또한 고급 노동력의 충원이라는 政治·經濟的 要求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립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는데, 이를 중

신으로 西洋學問이 본격적으로 國內에 소개·유입되었다. 植民地 중간관료의 양성과 식민지 統治를 合法化할 수 있는 大學 설립이 日帝에게는 시급한 문제였다. 이에 따라 日帝는 대중매체, 대학 등과 같은 제도들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제했다. 그들의 支配 체계모니가 관철되는 場으로서의 경성제국대학은 그러한 경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였다. 日帝는 양반계급과 관료, 상공인 계층을 支配 불력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고, 일본 留學 자체도 대부분 이와 같은 계층들에 의하여 독점되다시피 하였다.

이 시기에 西洋學問은 주로 일본 유학생들이나 경성제대 및 몇몇 국내 전문대학 출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이 당시 일본의 경우도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西歐의 學問이라는 것도 일본에서 再解釋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植民地 勢力의 이해관계에 의해 再構成되고 선택된 것이었다. 또한 그 대부분도 理工系列이 아니라 文學·法學·政治學·哲學 등이 主流를 이루었고, 그 내용들은 대체로 保守的·觀念的·虛無主義의이거나 데카당스한 것이 主流를 이루었다. 맑스 계통의 이론들이 流入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制度圈의 외곽이거나 非公式의인 경로를 통해 非合法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은 植民地 청년들 대부분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패배주의·감상주의에 빠져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었다. 또 이것은 ‘순수문학’, ‘순수예술’, ‘순수학문’ 등의 觀念的 形態 또는 데카당스로 나타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파시즘연합과 함께 反米·反英 분위기와 이데올로기가 팽배하게 되자, 일본의 서양 학문의 受容窓도 주로 독일로 변화하게 되어 당시 경성제대를 중심으로 독일 철학과 법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수입되었다. 이러한 식민지적 유산의 흔적은 오늘날 한국의 法學界와 哲學界에서도 어렵지 않게 發見할 수 있고 또 確認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日本의 民族文化抹殺政策은 오히려 西歐文化와 西洋學問의 탐닉

을 가능케 하였고, 특히 사변적인 독일 觀念哲學과 法學 등은 그 좋은 對象이 되었다. 비록 그 대상이 東洋的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예컨대 性理學이 主流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당시 學問 研究者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식민지 청년학도들은 理論이나 實踐이나, 즉 學問이나 民族解放 鬭爭이나 하는 결단과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었고, 學問을 직업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형태는 觀念的인 것으로의 도피일 수도 있었다. 물론 여기에 學問的 研究를 통해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나,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임에 틀림없었다.

2차대전 종식과 함께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었고 북한에는 소련군, 남한에는 미군이 점령한 후 미군정 3년은 남한을 政治·經濟·軍事·文化·社會的으로 재편성하였다. 미군정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유학생들과 한민당 계열의 보수적 親日附逆 세력을 중심으로 支配 供給을 再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社會主義 세력뿐만 아니라 民族主義 세력까지 權力로부터 소외되었다. 이러한 政治·經濟的 秩序의 재편은 이에 상응하는 知的·이데올로기적 질서의 재편을 동시에 要求하게 되었고, 그러한 요구는 스위 ‘국대안’으로 表出되었다.

‘국대안’에 의해 폐지된 10개 전문대학은 일제시대의 약조건 속에서도 독특한 傳統과 抗日 運動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反外勢·民族主義의 인 섹체가 매우 강한 곳이었다. ‘국대안’ 과정 과정에서 진보적·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던 수 많은 교수와 학생들은 학교의 폐교와 함께 추방되었다. 당시 한국의 빈곤한 경제 사정 속에서 大型 종합대학의 설립은 비현실적이고, 植民地 유산의 청산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관료주의적 획일화는 民主化에 역행한다는 광범위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관계자들은 이를 묵살하고 미국식 종합대학안을 서둘러 마무리지었다. 이처럼 학원 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국대안’이 미국의 文化的 帝國主義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일부 학자들의 새로운 문제제기는 재음미할 가치가 있

다고 본다.

어쨌든 미군정에 의한 ‘국대안’이 對日 종속적 질서를 對美 종속적 질서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음에는 틀림없다. 2차 세계대전 후 곧 시작된 냉전기류에 편승하여 재편된 한국의 支配勢力은 分斷 이데올로기를 內面化하고 反共을 전국민적인 合意 사항으로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친일부역 경력을 은폐하여 反共 民主主義者로서 화려하게 變身하였다. 그들이 2차대전에서 행했던 親日·反美 행각에 대한 콤플렉스는 동시에 맹목적인 親美主義를 강화시켰다. 분단 후 한국의 執權勢力이 보여준 신경질적인 레드 콤플렉스와 맹목적·반민족적인 친미주의는 정작 그들의 본질을 은폐시키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자신들의 생존과 기득권을 계속 지키기 위한 사사로운 수단이기도 하였다.

分斷·反共意識이 대중들의 意識 속에 점차 정착되고 反共이 支配의 이데올로기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여기에는 6·25 전쟁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민족주의적인 論理는 현실적인 힘을 喪失하고 미국식 이데올로기와 가치가 그 代用品으로 移植되어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대학도 미국식으로 개편되어 미국 이데올로기의 媒介體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교육의 미국화 경향은 문화적 종속의 한 편린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교육원조로 실시된 교육사절단의 파견, 국내 교육관계자들의 미국파견, 교환교수제 등은 미국 문화의 일방적인 유입과 함께 친미 세력의 강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교육풍토 속에서 西歐의 學問은 곧 미국식 학문을 意味하였고 미국의 ‘실용주의(pragmatism)’, ‘실증주의’ 그리고 ‘기능주의’가 대학의 소위 ‘主流理論’으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극단적인 냉전 이데올로기가 의식적으로 강화된 정치적·교육적 조건 하에서 西歐學問의 受容은 保守的·沒歷史的·機能主義的인 미국식 학문의 일방적 수입으로 知的·學問的 종속화뿐만 아니라 學問的 無批判的 受容으로 귀결되었다. 물론 당시 우리 學界의 상황이나 학자들의 知的 水準으로 보아 批判的 수용보다는 일차적인 理解 자체가 더 시급한 과제였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기성 지식인들에게서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받은 교수들이 독점적인 헤게모니 불력을 형성했던 우리의 학계가 해방 후 進步的·民族主義的·主體的인 태도가 아니라 冷戰狀況에 편승하여 保守的·無批判的·外勢追隨的 자세를 취했던 것은 어쩌면 親日·反民族 세력을 척결하지 못했던 정치·경제적 현실의 필연적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의 지적·학문적 불모화와 종속화는 한국의 人文·社會科學 분야에서 자신의 學問的 主體性을 喪失하고 無批判的·保守的·外勢指向的 학문풍토를 일반화시켰다. 이는 그후 계속된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 자체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비판적 反省의 기회를 암살하였다.

’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知的·學問的 종속화는 ‘학문적 종주국’의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학문적 시장(academic market)’의 변화 그리고 학술 연구자들의 층위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식민지 모국이었던 日本帝國主義의 패전과 미국의 등장은 동시에 學問市場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이 일본의 ‘學問的 消費市場’이 아니라—비록 한·일 국교 정상화 후 점차 변화되고는 있지만—미국의 ‘學問的 消費市場’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學界에서는 일본 유학이 아니라 미국 유학이 중시되고, 미국 유학생 출신들에 의해 학계가 주도됨으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의 政界·財界·官界·文化界 등에서 중추적 세력을 형성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며—자유주의적이라고 하더라도—친미적 경향이 짙고, 민족주의적 성향보다는 세계 시민주의적 색채가 농후하여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현실변혁에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상유지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푸코의 주장처럼 “권력이 지식을 생산한다는 점(이는 단지 지식이 권력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무한다거나 혹은 지식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

나라), 권력과 지식은 피차 상대방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 어떤 권력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은 모종의 지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어떤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권력관계를 전제·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던 지식을 私有財産으로 하는 지식인 계급이 保守的이며 權力指向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상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學問의 보편성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知識이 오늘날처럼 權力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生産되는 상황에서는 그 普遍妥當性의 神話—특히 人文·社會科學의 영역에서는—에만 집착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현실과의 대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學問이 현실적인 권력과 이데올로기적 관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知識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독점자본 세력과 支配權力의 이해관계와 무관할 수 없으며, 그 문화적 종속관계에 있는 한국의 학계는 그러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학문의 수용시 學問的 葛藤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는 상이한 역사적·문화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토대에 기초한 현실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학문은 무비판적으로 直輸入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당연히 批判的으로 선별·선택되어야 하고 受容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當爲性을 어떻게 실현하면서 왜곡된 현실을 극복·개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3. 學問의 土着化와 主體性 確立 :

#### 代替教科書의 當爲性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한국 사회에서 서구 학문의 무비판적인 수용태도, 우리 현실과는 상당한 편차가 있는 서양 학문을 어떻게 土着化할 것인가 하는 문제, 보수적 분단 이데올로기 담론의 일방적 헤게모니에 의한 學問 自由의 억압과 학문적 다양성의 위축 그리고 민족주의적 경향의 탈각과 상실의 문제이다. 이것은 물론 학문이 근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인 물적 토대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정치·경

제적 그리고 군사·사회적 구조가 냉전적·외세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회의식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진 ‘반공의식’과 함께 ‘의식의 식민지화(Kolonisierung des Bewußtseins)’ 현상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서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분단 이데올로기와 ‘의식의 식민지화’ 현상은 한국의 學界를 지배하는 헤게모니적 ‘담론’이 되어 우리 현실에 대한 비판과 구조적 모순에 대한 改革을 요구하는 양가주장을 위협시킬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요구를 左傾·容共이라 매도하는 극단적인 보수매커니즘을 창출하였다. 심지어 미국에 대한 비판조차 利敵 행위, 反國家 행위로 단죄하는 작태를 우리 학계가 연출하였고 또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公安 당국의 강압에 의해서 강요된 것만은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학문적 태도는 미·소의 탈냉전이 해체된 현재 비판적 반성을 통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련·동구권의 몰락=자본주의의 승리」라는 조야한 도식에 사로잡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존 학계의 不感症을 해소하고 균형잡힌 학문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思考’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무비판적·맹목적 이데올로기의 신봉, 외세지향적 매커니즘이 물고 온 학자들의 물역사적·몰의식적·무비판적인 태도, 동시에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가 脫민족적 태도를 배양시켰고 主體性을 잠식하였다. 이것은 일제 식민지 교육의 산물인 소위 ‘엽전의식’과 교묘하게 결합되어 민족 허무주의, 즉 민족 주체성의 경시로 귀결되었다. 서양의 學問과 價値가 무조건 민족적인 것보다 우월한 것으로 치부되어 영어 등 외국어가 학문적 언어로 보편화되었으며, 학문 종속화의 결과는 ‘學問的 事大意識’과 ‘意識의 植民地化’ 현상을 수반하여 학문의 수용에 있어서 主體性의 喪失로 귀착되었다. 이것은 다시 역으로 학문의 종속화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社會·經濟的 종속을 심화시켰다.

이제 學問의 영역에서 主體性의 확립과 學問

의 토착화는 시급한 時代的 要求이다. 그것은 조야한 反共意識의 克服과 意識의 植民地化를 벗어나려는 主體的 意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동시에 왜곡된 意識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회·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개혁을 수반하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주성과 주체성의 확립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민족적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폐쇄적이고 경직된 이데올로기의 억압으로부터 大學과 學問을 解放시켜 學問의 自律性과 多樣性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대체 교과서' 개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학술단체협의회 산하의 학술단체들이 우리 학계에서 금기시되어 온 맑스의 사상을 復權시키려고 기울이는 노력은 결코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서구의 인문·사회과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맑스와의 직·간접적인 대결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인정받는 學問의 自由가 政治的 힘에 의해서 억압받는다는 사실은 중세기의 종교재판과 다름이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學問은 학문적 담론과 토론을 통해서만 批判되고 修正될 수 있다. 미·소 냉전이 종식된 현재, 맑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학문적 접근과 토론이 오히려 活性化되어야 한다. 따라서 政治經濟學·批判社會學·北韓學·社會哲學 등의 강좌가 大學에 개설되고 많은 전공교수가 충원되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한국 社會와 歷史에 대한 비판적·계급적 분석, 유물론적 해석도 폭 넓게 수용되고 토론되어야 한다. 이때에야 비로소 맑스에 대한 편향적 오해도 불식될 수 있고 현 한국 대학의 절름발이식 교과과정도 극복될 수 있다. 단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左派的 視角의 복권이 천박한 도식주의나 교조주의로 빠져 오히려 학문과 사상의 비판과 창조성을 상실하고 맑스의 原典을 마치 鑿窟처럼 신성시하는 훈고학적 태도의 위험성이다. 교조주의가 인용과 입증만으로 도식화될 때, 맑스가 주장한 실증과 탐구 그리고 비판은 실증되지 않을 수 없다. 또 교조주의적 편향에 빠질 때 맑스의 사상만을 유일한 '科學'으

로 간주하여, 프루동의 과학에 대한 맹신을 '迷信'이라 비판한 맑스 자신을 배반하게 된다. 따라서 학단협의 산하 학술단체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체 교과서의 출판은 이러한 편협한 교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고 보다 폭 넓은 토론 과정과 비판 과정을 통해 편협하고 왜곡된 反共意識을 해체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요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民衆史觀에 대한 논의도 정치적 구호의 차원이 아니라 학문적 차원에서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되어야 한다.

'의식의 식민지화' 현상의 극복도 민족주의적 主體性과 歷史意識을 전제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때 민족주의란 편협한 國粹主義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이것이 西洋學問의 無條件的인 否定이나 拒絶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西歐의 文化와 學問을 수용해야만 하는 것 또한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한 時代的 要請이다. 단지 그것이 無批判的으로 일종의 '수입상품'으로 적수입되어 學問市場에 무차별 유통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西洋學問을 수용하는 個人이나 集團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體系的 認識뿐만 아니라 우리 歷史에 대한 主體的인 歷史意識을 가져야 한다. 土着化란 이러한 主體的 態度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學問에 대한 批判은 論理的 矛盾의 批判으로 充足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理論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歷史的 過程을 학문적으로 再構成함으로써 歷史的 批判이 여기에 보 완되어야 한다. 역사적 요인은 이론형성의 배경에 불과하다는 안이한 인식은 '비판적 해석학'에 의해서도 批判받은 지 이미 오래이다.

따라서 학자들에게, 그가 東洋學을 하든 西洋學을 하든 간에, 우리 韓國史에 대한 이해와 역사 의식은 필수적인 前提條件들이다. 歷史意識이 없는 分析哲學的·機能主義的·實證的 研究만으로는 批判的이며 主體的인 學問風土를 만들 수 없고 意識의 植民地化를 克服할 수도 없다. 학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 자체도 언제나 相對化하고 對象化할 수 있는 開放的인 態度가 필요하다. 學問의 世界에서는 권위주의도 폐쇄적인 태도도 통하지 않는다. 理性的 合理性:

판이 유일한 기준이 될 뿐이다. 따라서 親美的 경향이든 親蘇的 경향이든 그것이 우리의 學問發展에 저해가 될 때 우리는 이러한 事大主義의 偶像으로부터 自由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批判이 國家保安法으로 다스려지는 우스꽝스러운 작태는 한시 바빠 종식되어야 한다. 미국의 학자들도 자유롭게 하는 미국 批判이 어찌 우리에게 금지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물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에게 불평 등한 대접을 받아 온 한국의 학자들에게 그러한 부당한 사대주의적 요구를 어찌 강요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새로운 대체 교과서는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분석을 토대로 하여 外勞와의 역사적 갈등관계를 우리의 主體的 입장에서 기술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親美反共의 편협한 맹목주의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學問風土를 경색시켜 학문의 自由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교수 및 연구원의 층위와 그 公正性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역량있고 우수한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제도권 學問 자체에 批判的이고 그들과는 다른 學問的 패러다임을 가졌다는 단순한 이유로, 또한 그들이 소위 國內派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 왔다. 바로 이들이 大學의 외곽에서 學術研究所나 研究團體를 만들어 제도권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항하여 경쟁적 패러다임을 형성하

여 왔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制度圈의 학문적 체계모니가 잠식되거나 해체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들에 제도권 교수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마치 자신들의 既得權이 위협받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 자체는 우리 학계의 非學問的 풍토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킬 뿐이다. 요즘에는 기존 학계가 마치 아량이라도 배풀어서 비판자들을 수용하는 듯한 제스추어를 취하고 있으나 이런 자세도 또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學問의 발전에 '아웃사이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패러다임의 경쟁이 오히려 學問의 발전을 가져 온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수층원 과정에서 젊은 비판적 연구자들에게 용공이니 좌경이니 하는 딱지를 붙여서 소의시키는 反지성적인 작태는 한시 빨리 사라져야 한다. 그들에 대한 일격학 학문적 평가가 教授充員의 條件이 되어야 한다. 교수 상호 간의 친목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교양 수준에서 문제되어야지 그것이 교수층원의 절대적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과와 대학이 친목 단체일 수만은 없다.

대체 교과서의 시도가 대학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우리 학계의 편향적인 병폐를 지양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우리 학계의 과제인 學問의 土着化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